

# 박광온, 당내 화합·협치 '안정적 리더십' 보여줬다

###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소통 창구·현안 물밑 조정 호평 민생 중심 정책 추진...정부 실정 '강단있는 책임 추궁'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는 5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거야(巨野)의 원내 지휘봉을 잡은 후 특유의 온화한 성품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그 이후로도 두루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이어가며 갈등이 될 만한 현안을 물밑에서 조정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였으나, 이재명 대표와는 꾸준한 소통으로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5월 대통령실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제안했을 때도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하는 등 당의 통합을 최우선에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계파 갈등이 잦아든 것을 동력으로 삼아 당의 쇄신을 도모하는 데도 적잖은 공을 들였다.

지난 5월 14일 6시간에 걸쳐 열린 '쇄신 의원총회'는 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이에 대해 "내부에서 분출하는 혁신의 요구를 수렴해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제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한 당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한 것도 쇄신과 도덕성 회복 노력

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폼하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세대 갈등을 조정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며 먼저 자세를 낮춘 것 역시 이런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박 원내대표의 지난 100일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민생 중심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주4일제 제안, 전국적인 폭염이 예고된 데 따른 '에너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등은 민생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였다.

나이가 보수층이 역설해 온 보훈 예산 확대,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에도 힘을 실어줌으로써 진영에 갇히지 않는 정책 정당 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의 이와 같은 면모는 여당과의 협치를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여야가 협의하기 쉬운 대선 공통 공약부터 처리해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수해복구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수해대책 TF'를 구성해 수해-예방 지원법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국민 메시지나 대어(對輿) 발언에서 정제되고 품격 있는 면모를 보여줬다"며 "협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다만 취임 때부터 '사람 좋아서 걱정'이라는 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오른쪽)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의 우려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당내 소통 및 정부-여당과의 협상 기조에 방점을 찍다 보니 제1야당이 보여줘야 할 야성(野性)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현 정부의 실정이 이어지는데 국민이 체감하게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잡을 조치를 더 강단 있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김은경 '노인 폼하 논란' 공식 사과

### 민주 혁신위원장 대한노인회 방문...사퇴 요구는 일축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3일 '노인 폼하' 논란을 불러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일요일 청년 좌담회에서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노인 폼하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춘천 간담회에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하는 등 해명과 유감의 뜻을 밝힌 것임은 사실이다. 직접적인 표현의 사과를 한 것은 해당 발언 나올 때 처음이다.

당에서 전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당 내에서도 직접 사과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자들에게 "어르신들 헌신,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들었다. 그런 생각에 한치의 차이도 없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 일으키지

않게 더 신중히 발언하고 지난 며칠간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다시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라며 일축했다.

기자들과 만남 직후 김 위원장은 황희 의원 등과 함께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 김호일 노인회장 등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 했다"면서 "투표라는 게 이런 거라고 설명하다 보니 (발언이) 생각지 않게 퍼져나갔는데 판단을 못 했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 공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노인회 측의 질책에 "그런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손짜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뺐을 때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외치기도 했다.

노인회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자들에게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죄송스럽고 사죄드립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말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유사중복 사업 예산 폐지·삭감

### 정부,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총액한도 초과시 페널티 부과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칼을 빼든 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가운데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 규모는 18조1000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흡한 사업은 페널티를 준다.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